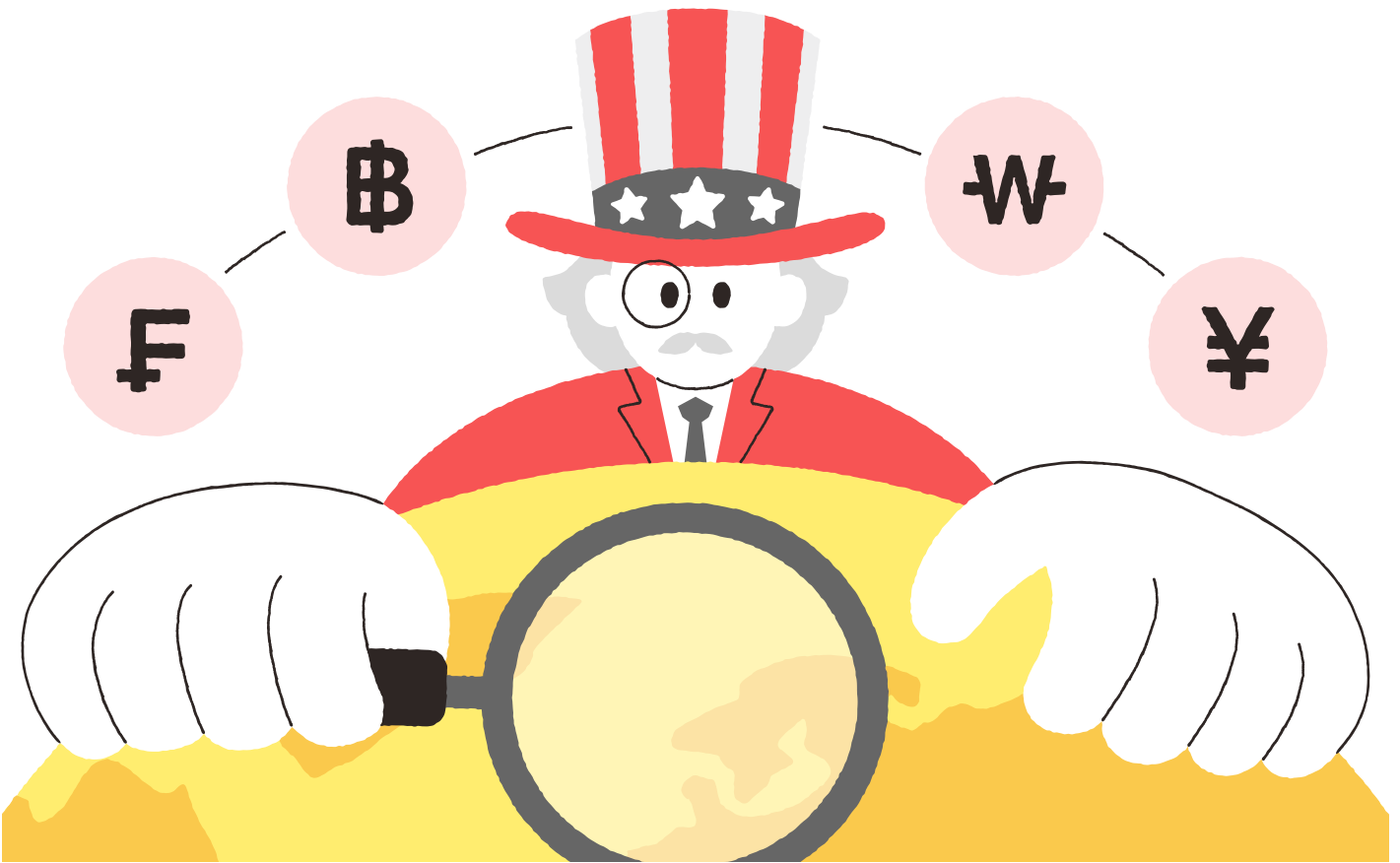


미국은 왜 다른 나라 돈 가치를 간섭할까?

키워드

환율

환율제도(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미국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미국과 무역 거래가 많은 주요 20개 교역국의 경제 상황과 환율 정책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을 이유로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와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예의 주시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환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현실의 환율제도, 그리고 미국이 타국의 환율을 감시하는 속내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은 실물 경제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환율(Exchange Rate)**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미국 1달러를 바꿀 때 필요한 원화의 액수로 '원/달러(USD/KRW)'로 표시합니다. 환율 상승(하락)은 곧 달러 가치의 상승(하락)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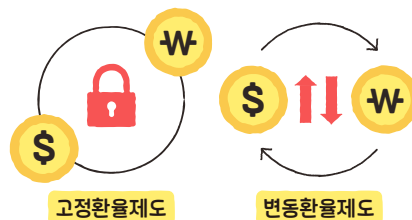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우리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수출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원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수입업자에게는 불리해지고, 이는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원화 가치 상승) 해외직구할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는 좋지만,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이 비싸져 수출 기업들은 물건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환율 변동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입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 하락과 환차손을 우려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환율의 추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국은 환율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며, 미국의 감시 명분은 무엇일까요? ✦

이처럼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묶어두기도(고정환율제도) 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기도(변동환율제도) 합니다. 이를 ●**환율제도**라고 하는데 두 제도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는 환율이 안정되어 무역과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는 경제 위기 때는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통화 가치를 방어하느라 막대한 외환을 소모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는 외환의 수급 상황에 따라 환율이 조정되어 경제 위기와 같은 갑작스러운 대내외 충격에도 받게 되는 타격은 적지만, 환율이 너무 자주 오르내리면 기업 운영이나 생활하는 데 불안 요인이 됩니다.

용어 정리

● 환율(Exchange Rate)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교환 비율입니다.

● 환율제도

국가 간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습니다.

●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특정 수준이나 범위에서 유지하려는 제도.

●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들도 시장의 자율 기능을 일부 허용하면서 정부가 변동 폭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라 하더라도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내려 경제가 불안해지면,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서 조절합니다. 이는 정당한 시장 안정화 조치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수출에 유리하게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로 환율 조작을 막기 위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불공정함을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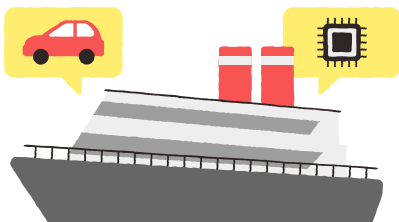


현재 국제사회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다자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회원국 간의 합의와 신속한 중재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이를 명목으로 자국 기준을 내세워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대외수지 불균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감시 기준, 공정하고 적합할까? ✦

현재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정량으로 ① 미국과의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일 것, ②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일 것, ③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외화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일 것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감시대상국이 되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독일의 사례는 이 기준의 적합성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독일은 **유로존** 회원국이고, 유로존 회원국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제가 유로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간접적인 연관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독일 정부가 자국 수출을 위해 독자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환율외에도 다양합니다. 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과 세계 경제의 흐름이 함께 맞물려 움직입니다.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더라도,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 있다면 수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환율이 불안정할 때, 세계적인 기술력

을 인정받는 자동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철저한 공급망 관리와 차별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을 유지하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용어 정리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회원국의 국제수지 문제 등을 지원하고, 각국의 경제·환율정책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유로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통화권으로 총 21개국(2026년 현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국의 속내는? ✨

메모 Memo

우리가 환율관찰대상국이 되었다고 곧바로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그 명단에 오를 경우, 미국이 양자 협의를 통해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압박하며, 미국산 제품의 시장 개방 확대나 미국에 유리하게 무역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특정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이를 이후 무역 협상이나 통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우리나라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투명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미국이 자국의 기준을 내세워 주요 교역국들의 환율을 감시하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를 자국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 영향력과 결합해 국제통상 무대에서 자국의 실리를 챙기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장바구니 물가부터 국가 산업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글로벌 경제에서 자국의 실리를 지키고 경제적 충격을 막아내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돈의 교환 비율이라는 경제 지식을 넘어, 국가 간의 관계 등 거시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기르는 데도 중요합니다. 

생각 넓히기

- 1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국내 물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봅시다.
- 2 고정환율제나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급격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환율을 운영하는지 현실적인 대처 방식을 알아봅시다.
- 3 미국이 자국만의 3대 정량 기준을 내세워 주요 교역국의 환율을 감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 일까요?

주호성 KDI 전문위원 | hosungj@kdi.re.kr

참고자료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026.

조은·최성락, 『26년 7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내용 및 평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6.7.24.

국제금융연구회,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경문사, 2009.

〈경제로 세상 읽기〉는 기본 경제 개념을 토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 또는 경제 흐름을 알아보는 콘텐츠입니다. 재정경제부 경제교육플랫폼 경제배움e+(www.econedu.go.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시리즈 모아보기